

#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



#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

## I. 국정속도를 높이는 입법전략

- ☑ 국정입법상황 실시간 관리 · 장애요인 해소
- ☑ 범정부 입법계획 전면 재검토
- ☑ 의원발의 법안의 정부 내 One-Voice 체계 강화

## II. 법령의 체계적 정비

- ☑ 정부 수립 후 최초로 행정법령 전수조사
- ☑ 제재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형벌 합리화
- ☑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
- ☑ 지방분권·균형성장 지원 법령정비

## III. 법적 자문제도 안착

- ☑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법적 자문제도 활성화

## IV. AI를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

- ☑ AI 법령 비서 서비스 도입
- ☑ 국가법령정보시스템 AX 추진
- ☑ 세계법제정보 플랫폼 구축

## I. 국정속도를 높이는 입법전략

# 01. 국정입법상황 실시간 관리 및 장애요인 해소

(7.28. 기준)

### 국정입법(법률) 과제

**782건**

과제 추진 **역대 최대**

### 국회 제출률

**71%**

556건 제출 **역대 최대**

### 국회 통과율

**27%**

213건 통과 **역대 최대**

### 국정 입법 추진 현황

#### 법률

통과율 **27%** (213건)

국회통과

제출률 **71%** (556건)

국회제출

전체 **782건**

#### 하위법령

완료율 **55%** (119건)

제·개정 완료

전체 **216건**

### 법제처의 역할

1

#### 국정입법계획 수립

782건 과제 발굴·관리

2

#### 추진상황 점검관리

정례 점검·부처 협업

3

#### 법적 쟁점 해소 장애요인 제거

이견조정 등 265건 입법지원

4

#### 국회통과 지원

556건 제출·213건 통과

## I. 국정속도를 높이는 입법전략

# 02. 범정부 입법계획 전면 재검토

### 법률 제정→개정으로 입법을 빠르게

✓ 제정 예정 국정과제 법안의 입법형식 변경

제정 예정 **49건** 중 **25건**을 개정으로

#### 사례

#### • 방과후학교 지원특별법(가칭)

방과후 돌봄·교육의 목표, 운영체계,  
중앙·지방정부 책무 등 법적 근거 마련

→ 초·중등교육법 **일부 개정**

### 법률→하위법령으로 정책 추진을 빠르게

✓ 범정부 법률 입법계획 재검토

**768건** 중 **92건** 하위법령 신속추진

#### 사례

#### 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

응급의료기관 환자 수용 능력 정보 공유,  
중앙·광역응급상황실 지정·설치 및 운영

→ 같은 법 시행령 **개정**으로 추진

## I. 국정속도를 높이는 입법전략

# 03. 의원발의 법안의 정부 내 One-Voice 체계 강화

### 사전협의 의무화

- ☑ 정부요청 의원발의 법안의  
법제처 **사전협의 의무화**

- 예산·조직·규제 등  
**부처협의 필요사항** 조사
- **법리적 쟁점 유무** 사전 협의

### 전수 모니터링 실시

- ☑ 부처 간 협의 필요사항 검토 대상을  
**전체 의원발의 법안**으로 확대
- \* 전체 의원발의 법안 수:  
(’24년) 7,276건 (’25년) 8,275건

- 의원발의 법안 전수 **모니터링**  
**전담부서 신설**(’26.6월), 부처간  
협의 및 법리적 검토 필요사항 조사

### 이견 조정 강화

- ☑ 법리적 검토 필요 법안,  
이견 발생 우려 법안은  
요청이 없어도 **선제적 조정**

- 참전유공자법 등 **국정과제 법안**  
**32건**의 조정 필요사항  
**선제적 검토**

## II. 법령의 체계적 정비

# 01. 정부 수립 후 최초로 행정법령 전수조사

(7.28. 기준)

### 법체계 바로 세우기

✓ 연내 **3,496개** 행정법령 전면 검토

2,910개 검토완료, 118개 과제 우선 정비 추진



#### ✓ 법 체계 정비 과제 유형

- 형식상·내용상 위임범위일탈
- 행정입법 부작위
- 각종 기본법,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법 체계·용어 정비

### 국민 불편 해소

#### ✓ 정책현장 기반

**96개** 과제 발굴

→ **46개** 우선정비

#### 사례

**겨울철 보도에 쌓인 눈, 제설 카트로 신속 제설 허용**

(종전) 보도에서는 사람이 타지 않는 보수·유지기구만 통행 가능

(개선) 보도 제설 작업을 위해 사람이 타는 소형 제설 카트 사용을 허용

## II. 법령의 체계적 정비

# 02. 제재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형벌 합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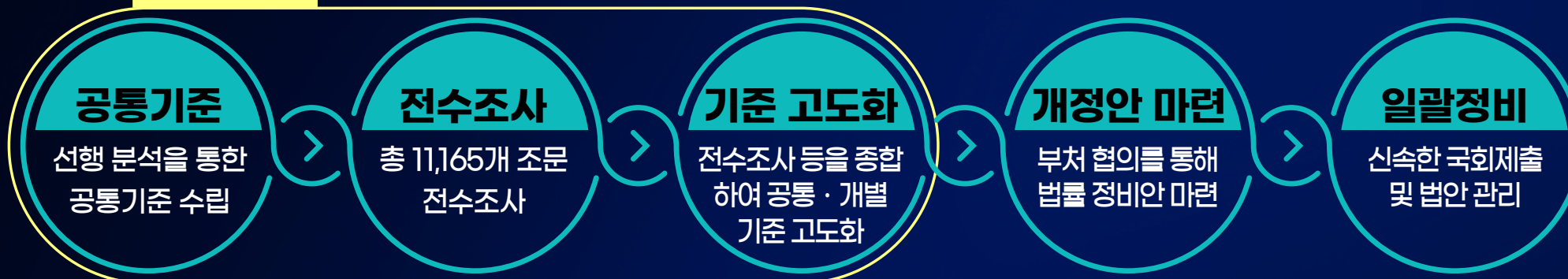
**17개** 부처 참여  
법정부 추진단 (7월 출범)

**11,165개** 조문  
전수조사

**2년** 내  
성과창출 목표

## 형벌 합리화 업무 추진 흐름

동시추진



## II. 법령의 체계적 정비

# 03. 「행정기본법」 개정 추진

### 「행정기본법」이란?

#### ☑ 의의

- 행정의 일반원칙, 취소·철회와 같은 처분기준 마련 등 학설·판례로만 인정되던 **행정부의 원칙과 공통적 제도를 단일 법령에 체계화한 법령** ('21년 제정)
- 수많은 법령이 유사·공통제도를 달리 규정해 사안마다 수백개 개별법을 개정하던 문제 개선,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

### 행정혁신을 촉진하는 개정 추진

#### ☑ 현장의 고민을 덜어주는 기준 제시

- 공익상 필요한 경우 **공법상 계약의 변경·해지 및 손실보상**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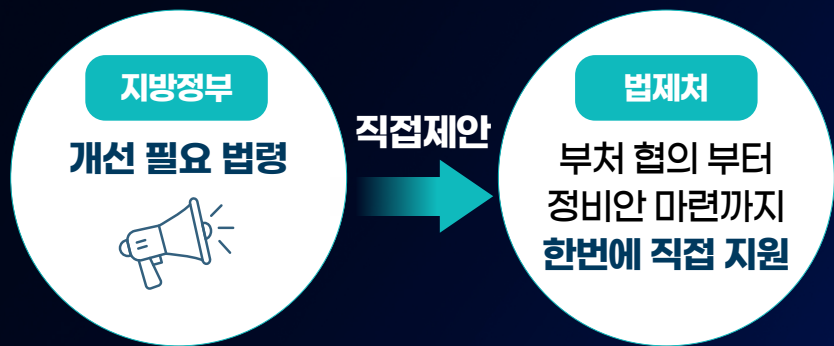
#### ☑ 자동적 처분 등 공공분야 AX 대응 검토

- 1 알고리즘 설명 청구권
- 2 인간에 의한 재심사 요청
- 3 권익 침해시 책임 소재 명확화

## II. 법령의 체계적 정비

# 04.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을 지원하는 법령정비

### 지방정부 제안 정비



'26년 상반기 14건 협의 및 정비안 마련완료

#### 사례

공공하수도 관리청이 공공하수도 공사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할 때 개인의 신고부담 완화(하수도법 시행규칙)

### 지역 맞춤형 정비

- ✓ 지역 현안의 지방주도 해결을 위한 법령 개선
  - 법제처·행안부·지방시대위·지방4대협의체 협업
  - 58개 법률 정비과제 발굴·정비 추진 중

#### 사례

(종전) 홍보용 확성기, 음향장치 부착 이륜자동차 등 이동소음 원인 기계·기구를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
(개선)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동소음 원인 기계·기구를 추가할 수 있도록 소음·진동관리법에 위임 근거 신설

### Ⅲ. 법적 자문제도 안착

##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법적 자문제도 활성화

### 문제해결형 법적 자문 제공

✓ 행정 전 과정의 공법적 쟁점에 대해 자문 제공

✓ 법령 입안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해결책 제시

**정책기획** 국정현안·정책수립 시 예상 법적 쟁점·대안 종합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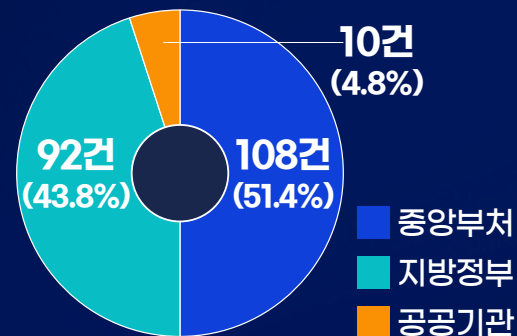
**법령입안** 입법화 단계의 정합성, 타 법령과의 상충 여부 등 검토

**정책집행** 법령 등의 해석, 소송·감사 리스크 사전 점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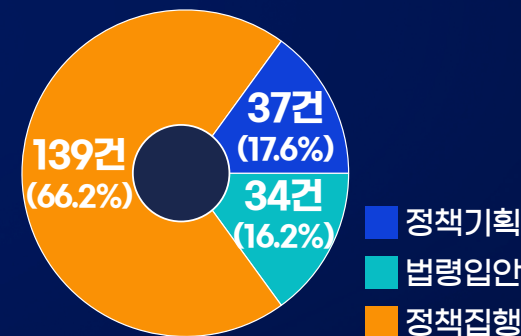
### 법적 자문 제공 현황

✓ 3개월(5.6 ~ 7.28)간  
**210건** 요청, **155건** 회신 (평균 17일 소요)

✓ 기관별 요청 건수



✓ 정책 단계별 요청 건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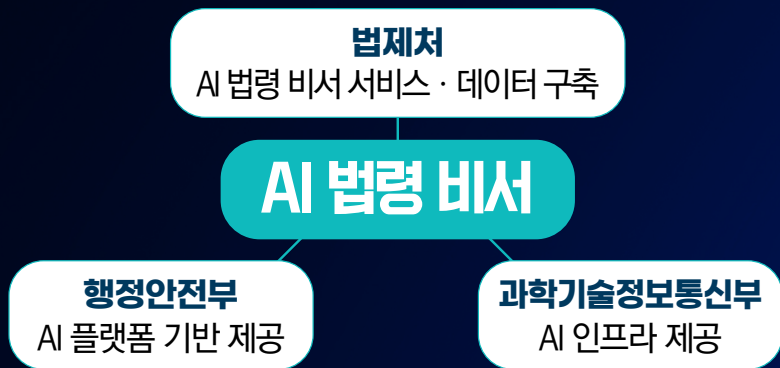
## IV. AI를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

# 법령정보 서비스 AX 가속화

### 공무원 업무 효율 향상

#### ✓ AI 법령 비서 도입

- 업무 수행 과정 상의 **법적 질의에 대한 1차적 검토의견** 제공 (법제처·행안부·과기부 협업)



### 대국민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

#### ✓ 국가법령정보센터

- 법령특화 AI 모델 도입(~'26년)
- AI 법령 검색 대국민 서비스 개시('27년)

#### ✓ 세계법제정보센터

- AI를 활용, 최신 해외법령을 일상적 한국어로 실시간 검색 · 활용
- 차세대 세계법제정보플랫폼 구축 ('27년말 시범 서비스 개시 예정)

**국정의 속도를 높이는 법제지원으로  
국가대전환을 완성하겠습니다.**